

보도참고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11. 22(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11. 22(화) 14:0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
담당과장	김윤상 (2150-5350)	담당자	권기중 사무관 (2150-5352)

제목: '11년도 제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

- ☐ 정부는 11.22일(화) 재정위험관리위원회(위원장: 기획재정부장관)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별첨 「'11년도 제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

※ 별첨: 「'11년도 제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」

별 첨

'11년도 제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

2011. 11. 22 (화)

기 획 재 정 부

I 심층평가 대상사업군 선정개요

-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, 관계기관 의견,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평가 대상후보 검토
 - 국회, 감사원, 언론 등 외부지적 사항, 재정부내 관련 실·국 및 출연연구기관 수요조사 결과 등 고려
 - '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('10년도 성과평가) 결과 “미흡” 또는 “매우 미흡” 평가를 받은 132개 사업 검토
- 평가대상 후보 사업군 중 지속적인 예산 증가, 지출효율화 필요성, '13년 예산안 편성시 활용 등 평가가 시급한 5개 사업군 선정

대상사업군	사업개요	비 고
① 지역발전산업 지원	• 광역경제권 선도산업, 시·도 전략 산업, 시·군·구 지역특화산업 등 • '11년 예산: 7,662억원	• 국회 등 지적 • 수요조사시 추천
② 저출산 대응	• 일과 가정의 양립, 결혼·임신·출산 등 지원, 자녀양육비용 지원, 육아 인프라 확충 등 • '11년 예산: 2조 9,650억원	• 국회 등 지적 • 재정사업 자율평가 “미흡” • 수요조사시 추천
③ 도로 교통안전 지원	• 교통안전 교육·홍보, 시설 개선, 교통 단속 등 • '11년 예산: 5,932억원	• 국회, 감사원 등 지적
④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	• 사회서비스 직접 지원,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,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• '11년 예산: 6,620억원	• 국회 등 지적 • 수요조사시 추천
⑤ 에너지 효율화 지원	•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, 에너지 절약 유도,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• '11년 예산: 1조 5,680억원	• 국회, 감사원 등 지적 • 재정사업 자율평가 “미흡” • 수요조사시 추천

- 금번에 선정된 5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는 12월중 착수하여 '12.6월말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
 - 심층평가를 통해 각 사업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,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재원배분, 유사·중복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

Ⅱ 심층평가 대상사업군 현황 및 평가 필요성

1 지역발전산업 지원 사업군

- **[사업개요]**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R&D 지원, 지역산업기반 구축, 기업지원서비스 등 제공
- (광역경제권 선도산업) 12개 선도산업의 20개 프로젝트에 대한 R&D 지원 및 R&D 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
 - (시·도 전략산업)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R&D 및 사업화 지원, 테크노파크 조성 및 지역특화센터 구축 지원
 - (시·군·구 지역특화산업) 지역연고산업 육성, 지자체연구소 구축, 지역혁신센터 조성 지원

< 예 산 현 황 >

(억원)			
사업명	'09년	'10년	'11년
계	7,102	7,790	7,662
▪ 광역경제권 선도산업	2,016	3,295	3,850
▪ 시·도 전략산업	3,795	3,308	2,688
▪ 시·군·구 지역특화산업	1,291	1,187	1,124

- **[평가 필요성]** 재정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고,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 등 운영상 문제점도 지속 지적
- 일부 선도산업은 지역대표성이 낮고, 전략산업은 시설, 장비 등 기반구축 중심으로 지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한계
 - 복잡한 지원 프로그램, 사업별로 설립·운영 중인 지원기관 등을 총괄·조정하고 연계시키는 체계 미흡
 - 지역별 지원대상 산업분야 선정시 타당성이 부족하거나, 지원 사업간 유사·중복 문제 지속 제기

- **[사업개요]**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성장 잠재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증대

※ 복지부, 고용부, 여성부 등 7개 부처에서 34개 사업 시행 중

- **(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)** 육아휴직급여, 산전후 휴가급여, 직장 보육시설 지원 등 9개 사업
- **(결혼·임신·출산 등 지원)** 필수예방접종 지원, 난임부부 지원,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등 9개 사업
- **(자녀양육비용 지원)** 영유아 보육료 지원, 양육수당 지급,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 등 3개 사업
- **(육아 인프라 확충)** 방과후 돌봄 서비스, 시간연장형 교사 지원,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13개 사업

< 예산 현황 >

(억원)

구 분	'09년	'10년	'11년
계	19,669	24,509	29,650
▪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(9개)	2,857	3,767	4,622
▪ 결혼·임신·출산 등 지원 (9개)	993	1,242	1,311
▪ 자녀양육비용 지원 (3개)	13,958	17,088	20,554
▪ 육아인프라 확충 (13개)	1,861	2,412	3,163

- **[평가 필요성]** 저출산 대응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,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

-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**합계출산율***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, 아직 **OECD 평균('09년 1.74)**에는 미달

*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: ('06) 1.12 → ('08) 1.19 → ('10) 1.22

- 재정지원이 **특정 분야 및 계층에 집중***되어 있고, 부처간, 중앙·지자체간** 사업의 **연계·조정도 미흡**

* (분야)자녀양육비용 지원에 편중('11년 예산의 70%), (계층)저소득층 및 기혼여성 위주

**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축하금, 양육비 지원 등 유사 사업을 시행

- **[사업개요]** 교통안전 교육·홍보 및 안전한 교통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

※ 국토부, 행안부, 경찰청 등 3개 부처에서 17개 사업 시행 중

- (교통안전 교육·홍보) 도로 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, 교통안전 교육·홍보 등 4개 사업
- (교통안전시설 개선)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,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, 위험도로 개량 등 11개 사업
- (교통단속) 교통과학 장비관리(무인단속장비, 음주측정기,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등), 교통경찰 활동비 등 2개 사업

< 예산 현황 >

(억원)

사업명	'09년	'10년	'11년
계	5,808	5,917	5,932
▪ 교통안전 교육·홍보 (4개)	78	106	38
▪ 교통안전 시설 개선 (11개)	4,150	4,233	4,050
▪ 교통단속 (2개)	1,580	1,578	1,844

- **[평가 필요성]** 지속적인 재정투자로 사업성과가 향상되고 있으나,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

* '09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.8명으로 OECD 평균(1.2명)의 2배 이상 수준이며, OECD 32개국중 30위

- 재정지출이 시설투자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,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

*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율('10년 77%)이 높으나, 교육·홍보 관련 예산은 38억원에 불과

- 체계적인 사업 관리시스템이 미비*하고, 일부 사업의 유사·중복 및 연계 미흡 등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

* 사고 통계자료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업 선정 절차, 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미비

- **[사업개요]**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**간병, 보육, 돌봄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**

※ 복지부, 고용부, 여성부 등 5개 부처에서 19개 사업 시행 중

- 가사간병·산모신생아도우미(388억원, 복지부) 및 장애인활동 지원(1,929억원, 복지부), 사회적기업 육성(1,635억원, 고용부) 등이 대표 사업

< 예산 현황 >

(억원)

구 분	'09년	'10년	'11년
계	4,901	5,308	6,620
▪ 사회서비스 직접 지원 (10개)	2,139	2,560	3,470
▪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(6개)	1,967	1,590	1,734
▪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(3개)	795	1,158	1,416

- **[평가 필요성]** 사회서비스가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* 되었으나 서비스의 질, 수요자 만족도, 서비스 전달 효율성 등은 낮은 수준

* 사회서비스 제공인력: ('07) 33천명 → ('09) 75천명
사회서비스 수혜자: ('07) 110천명 → ('09) 414천명

- 일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 공급 되는 등 **수급 불균형 발생**

* (노인 가사간병도우미) 과다 공급, (장애인활동 보조) 과소 공급 등

-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지원 의존도가 높고 자생력이 낮아,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**실질적인 민간자원 활용이 미흡**
-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간 연계, 부처간·중앙과 지방간 관련 정보 교환 등을 위한 **종합 시스템도 부재**

□ **[사업개요]** 에너지 수급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
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※ 지경부, 농림부 등 3개 부처에서 12개 사업 시행 중

-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비용 융자(6,018억원, 지경부),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보조 및 융자(2,408억원, 지경부) 등이 대표적 사업

< 예 산 현 황 >

(억원)

구 분	'09년	'10년	'11년
계	12,287	14,020	15,680
▪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지원(4개)	5,987	7,334	8,229
▪ 에너지 절약유도 (4개)	569	653	593
▪ 신재생에너지 보급 (4개)	5,731	6,033	6,858

□ **[평가 필요성]**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, 국내에너지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고,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여전히 3% 미만

* '00년부터 '09년까지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2.3%, '02년부터 '10년간 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5.7%

- 예산·세제 혜택 등 과다 지원*, 태양광 등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 등의 문제점 지적

*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하는 경우 융자 등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,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음

- 지원대상기업 선정*, 사후평가에 따른 환류체계** 등도 미흡

*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시 시설설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연말에 자금이 남을 경우 대기업을 지원

**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에너지 진단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35% 미만